

**Vol. 01**

2022.01.17.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mailto: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mailto: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정인전임 [jjpark@hjcustoms.co.kr](mailto:jjpark@hjcustoms.co.kr)

##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원 사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안전확인대상 생활물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추가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추가	<u>가정용 미용기기</u> 를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추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추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 되 별도의 제품시험 의무 등은 없는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되어 오던 <u>방한용·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u> 를 제품시험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 상생활용품에 추가

(3) 시행일

'21.12. 22.

## I. 법령 개정사항

###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개정 이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검역증명서 첨부 및 전송 불필요 항목 추가	식물 등의 수입 시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u>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u>

#### (3) 시행일

'21.12. 29.

## I. 법령 개정사항

## 3.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조정관세 적용기간 연장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기간을 1년 연장
적용기간 연장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 정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

## (3) 시행일

'22.01.01.

## I. 법령 개정사항

## 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에 따라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할당관세 적용 추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7개 물품은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등 총 90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할당관세 적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2년 하반기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li> <li>-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나머지 82개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li> </ul>

## (3) 시행일

'22.01.01.

## I. 법령 개정사항

###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u>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u>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신고, 외국물품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및 외국물품 등의 멸실·분실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화물단위를 유지한 채 보관·사용하지 않고 개인 구매단위로 분할·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u>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u>

#### (3) 시행일

'22.01.28.

## II. 입안 예고

###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프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 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규정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 절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프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II. 입안 예고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u>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u>
원산지 조사방법 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u>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u> 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u>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u> 으로 함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 <u>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u> 」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 <u>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u> 」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u>상용견품을 포함</u>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1.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 인지 여부 등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6.3.7.부터 '17.3.13.까지 블루투스 스피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8518.21-0000 호(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 하였으나, 처분청이 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에 '쟁점물품이 수정 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자금사정이 되는대로 분할 신고·납부 후 통보할 것'이라고 회신 후 '쟁점물품은 범칙조사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이후로 수정신고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

나. 000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15.12.29.부터 '17.3.21.까지 HSK 8518.21-0000 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HSK 8518.22-0000 호(복합형 스피커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7.2%)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1.14.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결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관세부가제척기간 경과 건에 대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경정 및 심판청구 기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관세법」 제 42 조 제 1 항 제 2 호의 금액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서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수입신고 000은 2017년 000세관장의 범칙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과세처분대상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아무런 질문. 조사도 없이 내부자료만을 검토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믿고 나머지 모델에 대하여 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대상 모델 이외의 제품인 쟁점물품에 대해서 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한 것이므로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1.11.05. (조심 2021 관 0057)

###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 8543.70-9090 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8486.90-2010 호(0%)로 분류할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5.4.3.부터 ‘16.3.21.까지 000(이하 “쟁점물품①”) 및 000(이하 “쟁점물품②”,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을 합하여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①을 HSK 8504.40-1090 호(8%), 8543.70-9090 호(8%), 8537.10-9000 호(8%) 또는 7326.90-9000(8%)호로, 쟁점물품②를 HSK 8504.32-9010 호(8%), 8537.10-9000 호(8%), 8543.70-9020 호(8%), 8543.70-9090 호(8%), 9032.89-9090 호(8%) 또는 7326.90-9000(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청구법인은 ‘20.3.31. 및 ‘20.9.15.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2010 호(0%)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5.28. 및 ‘20.11.13. 이를 각각 기각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8.21. 및 ‘21.2.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 8543.70-9090 호에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쟁점물품은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해설서에서 제시한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 8543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관세율표 제 16 부 총설(II-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 16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 8543 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건식 식각기의 부분품이 속하는 제8486.90소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1.11.16. (조심 2020 관 0162)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6.12.12.부터 '19.2.20.까지 000 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HSK 8504.40-1090 호(4%~7%) 및 8543.70-9090 호(8%)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6.28.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19.8.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543.70-9090 호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19.8.30. 재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19.12.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8543.70-9090 호로 결정하여 재심사 회신을 함.

나.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정에 따라 '20.5.11.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수정신고 후 납부한 뒤, '20.5.14.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6.3., '20.6.4. 이를 각각 기각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품목분류 및 해당 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신고 기간 중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제 8504 호가 아닌 제 8543 호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

### (3) 결정일

'21.11.16. (조심 2020 관 0164)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4.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5.12.22.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제 196 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및 소속 직원 등(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16.4.28.부터 '16.10.4.까지 4 차례에 걸쳐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에서 고가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구매하게 한 후 해외에서 이를 넘겨받아 국내에 밀반입하였고, 000 세관장은 '19.9.25. 피고인들의 밀반입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법인 및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000 청에 고발함에 따라 처분청은 '20.3.12. 청구법인에게 위 고발 사실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 17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2 개월)'을 할 예정이라고 통지함.

나. 000 청은 '20.6.26.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기소하였지만,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1 점의 밀수입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20.7.9. '자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20.6.26.자 기소 내용을 고려한 반입정지 기간 및 청구법인의 '판매 및 반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태료 부과 요청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7.15. 청구법인에게 정지처분 기간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

1) 관세법 제 178 조의 규정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1 항 제 2 호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두고 있는 점 등

2) 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 19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1 일당 과징금 금액은 청구법인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 천분의 1 의 금액으로 하고, 물품 반입 등의 정지일수에 1 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이 건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3) 결정일

'21.11.25. (조심 2020 관 0181)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5.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7.3.9 부터 '17.5.24.까지 쟁점수출자와 무선통신용 기기 부분품인 쟁점양산제품의 시작품(이하 "쟁점물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개발계약'(이하 "쟁점계약",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쟁점개발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7.2.24.부터 '17.12.11.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수출자가 개발 및 제작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함.

나. 청구법인은 '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계약과 유사한 쟁점수출자에게 외주개발계약에 따른 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1.3.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전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이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1.5.31. 및 '21.6.23.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를 경정. 고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1) 각 쟁점계약서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 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1.12.01. (조심 2021 관 0109)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6.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 6201 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 6202 호로 분류할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5.10.30.부터 ‘19.9.16.까지 전면 부분의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사이즈 90 호 이하의 DOWN JACKET 등(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6202.13-1000 호 및 6202.93-1000 호 [아-태 협정관세율 6.5%, 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 6202 호”]의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등’(이하 “여성용”)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19.10.7.부터 ‘20.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등’(이하 “남성용”)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6201.13-1000 호 및 6201.93-1000 호(기본관세율 13%, 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 6201 호”)로 변경하여, ‘20.10.29., ‘20.11.23., ‘20.12.23. 및 ‘21.4.27. 청구법인에게 등을 경정. 고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1.1.14., ‘21.6.10.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 6201 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작업의뢰서상 이중실선이 000 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000 의 경계선에도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중실선만으로 쟁점물품이 명확히 여성용으로 재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관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85 호 사이즈도 남성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청구법인 및 타사의 남성용 및 여성용 의류와 비교하여 그 치수 등이 더 크거나 유사하여 쟁점물품이 여성용으로 재단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 62 류 주 제 8 호에서 재단법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전면 부분의 잠김 방향에 따라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처분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 6202 호로 분류하여 왔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3) 결정일

‘21.12.06. (조심 2021 관 0030)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7.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 9002.11 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 9002.19 호로 분류할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17.1.13.부터 '21.1.16.까지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000(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HSK 9001.90- 9000 호(WTO 양허관세율 0~4%)의 '기타 렌즈 등(장착되지 아니한 것)' 및 HSK 9002.19-9000 호(WTO 양허관세율 0~6.5%)의 '기타 대물렌즈(장착된 것)'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청구법인은 '20.9.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2.2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9002.11-9090 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 9002.11 호")의 '카메라용. 영사기용. 사진 확대기용. 사진 축소기용의 기타 대물렌즈'(이하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전회신에 따라 '21.1.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 9002.11 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보정 및 수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1.1.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HSK 제 9002.19-9000 호(이하 "제 9002.19 호")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1.3.25. 이를 거부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1.5.4.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심판청구 기각

다음의 사유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 성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광성장치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 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열화상카메라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에 장착되는 쟁점 물품은 제 9002.11 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쟁점물품은 제 9002.11 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3) 결정일

'21.12.06. (조심 2021 관 0068)

### Ⅲ. 조세심판원 사례

#### 8.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 6904 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 6907 호로 분류할지

##### (1)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16.4.30.부터 ‘19.5.3.까지 두께가 25mm 이하인 000(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6901.00-2000 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3.2%, 이하 “제 6901 호”]의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블록’ 및 HSK 6904.10-0000 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 6904 호”)의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 년 HS 개정 이전의 HSK 6907.90-9000 호(기본관세율 8%)의 ‘기타의 타일’로, 2017 년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2017 년 HS 개정 이후의 HSK 6907.23-0000 호(기본관세율 8%, 이하 위 두 품목번호를 합하여 “제 6907 호”)로 변경하여, ‘21.4.12.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 고지 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1.6.1.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결정요지 : 재조사 결정

다음의 사유에 따라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라는 전제 하에 두께를 기준으로 삼아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타일로 보아 제 6907 호로 분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은 약 70~120 년 전에 벚짚이나 소똥 등으로 구워 만든 고벽돌을 두 조각으로 잘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도자질 또는 자기길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 (3) 결정일

’21.12.06. (조심 2021 관 0081)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1.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종이 원본 C/O 대신 C/O 사본\* 제출이 가능. 단, 국가에 따라 사후에 종이 원본 C/O를 보완해야 하는 등 C/O 사본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각기 상이

\* 인정되는 사본 : 종이 원본 C/O의 복사본, 스캔본(전자파일), 스캔본의 출력물

**[통관원활화 합의사항 등]** 우리 수출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O의 사소한 차이, 통관 애로 등 7가지 주요 유형에 대해 원활히 통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의

국가	인정 조건
한국	별도 조건 없이 인정
브루나이	인정. 다만 원본 CO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캄보디아	인정. 원본 CO는 ATIGA와 아세안+1 FTA의 경우 45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함. ※ 제공 중. 관세청 사이트( <a href="https://customs.go.kr/co.html">https://customs.go.kr/co.html</a> )에서 확인
인도네시아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는 CO의 컬러 (스캔)복사본을 인정,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본 CO를 제출해야 함. ※ 인도네시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행 중

국가	인정 조건
라오스	CO의 (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본 규정은 라오스에서는 2021년 연말까지 효력을 유지. CO의 진위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당국으로부터 제공됨. ※ 제공 중. 관세청 사이트( <a href="https://customs.go.kr/co.html">https://customs.go.kr/co.html</a> )에서 확인
말레이시아	인정. 원본 CO는 자국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미얀마	CO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스캔)사본 인정. 그러한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가능 함. 그러나 원본 CO는 물품이 반출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본 규정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매달 연장될 수 있음.
필리핀	사본 인정은 확인되었으나,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필요 여부 등은 아직 확인 중
싱가포르	인정
태국	CO의 (스캔)복사본을 인정. 원본 CO는 반드시 물품의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본 규정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
베트남	국내 세관이 발급당국의 웹사이트/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으로 CO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본)인정. ※ 코로나 기간 중 한국산 수입물품의 CO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재무부 지침 발행·시행 중(8.17)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2.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활용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21.12.08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2월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

##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 실시

수출입기업이 협정 발효 즉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1.12.08부터 전국 본부·직할세관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특히 기존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대폭 간소한 절차를 적용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음

## ② 전국 본부·직할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지원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146명을 배치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상담, 설명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협정 활용을 전방위 지원한다.

## ③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수출기업 또는 원재료공급 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편하게 판정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청 FTA portal site를 통해 회원국별 최적세율, 수출입통관 제도 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특화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역내 국가 세관 간 이행협력체제 구축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최초 체결하는 일본과 이행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관이 파견된 주요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이행과 관련한 쟁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임재현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22 개정안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안을 수용하고,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와 그간 운용상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① WCO HS협약 개정(HS 2022) 및 2022년 관세율표 개정 반영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는 5년마다 개정되며 차기 개정안(HS 2022)은 '22.1.1.부터 발효됨. HS 협약 개정에 따라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의 품목코드를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등)의 코드를 삭제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2년 관세율표에서 삭제·통합된 세목의 HSK 코드를 조정함

##### ② 관계부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 반영

중장기 무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차전지 원료 등 신산업 관련 품목, 반도체재료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코드를 신설하고 최근 무역량 증가로 원산지 및 통계 관리 필요성이 있는 중요 농수산물의 품목코드를 신설함

##### ③ 환경 및 사회안전을 위한 품목코드 신설

환경보호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계관리를 위해 해당 품목코드를 신설하는 한편,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예방을 위하여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함

##### ④ HSK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

무역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시장에서 소멸되거나 거래가 급감하여 코드 유지에 실익이 없는 HSK를 삭제·통합하는 한편, 관세율표 체계와 맞지 않거나 지나친 세분류로 수출입자에게 혼란을 주는 코드의 정비 및 간소화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 가능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4.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계기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12.24.자로 발효되었다.

※ 협정 원문은 조약정보 - 양자조약에서 조회 가능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 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 죄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

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한다.

※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 (아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중동)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미주) 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5. CPTPP 가입,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2.28(화) 오후, CPTPP 추진 관련 통상, 외교, 농림, 수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화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정부는 지난 '21.12.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 착수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3~4월 가입신청을 목표로 통상 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농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CPTPP 추진방향 및 아태 통상질서 대응, 국내 민감분야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아·태지역 통상질서와 디지털 등 글로벌 규범의 선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신규 가입신청국\*에 대한 실질적 가입논의가 올해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올해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힘

\* '21.02 가입을 신청한 영국은 협상 진행중이며, 이후 중국(9.16), 대만(9.22)과 최근 에콰도르(12.17)가 뉴질랜드(기탁국)에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강화하고, 메가 경제블록 참여로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수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설명함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통상환경에서 CPTPP 가입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크다는데 공감하며, 민감분야 피해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선제적 검토를 제언했고, 국제통상학회장 강문성 교수는 특히, 대만의 CPTPP 가입시 우리의 불참비용을 우려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신청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3~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CPTPP 회원국 통상장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